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절차' 빨라진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현안회의
국토부, 예타·시행자 선정 등 신속
원 장관 "균형발전 위해 적극 지원"
시, 혼잡도로 개선 등 7건 현안건의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4월 중에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간 단축에 나선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국가산단 조기착공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면서 "산단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도 4월 중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뿐 아니라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된 규제·예산관한을 전 부처들이 참여하며, 오는 30일 발족될 예정이다. 첫 회의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 및 광주시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민들이 27일 광주 북구 임동 옛 일신방직 터(복합쇼핑몰 예정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회의를 갖고 복합쇼핑몰 조성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시는 이날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포화상태(91%)인 점을 고려할 때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절실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제1

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미래차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차 생태계 확장의 엔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법정부 차원에서 광주발전을 돕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어 원희룡 장관에게 교통

혼잡도로 개선 등 지역현안 7개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인 광천사거리와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적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과 임동·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반영, 우회도로망 개선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도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이용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 송정역-광주역 구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한 광주 남북의 교통 단절과 지역발전 저해, 사고위험이 높아 14km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도 요청했다. 주말 기준 광주지역 KTX 운행 횟수는 48편으로 대구 121편, 부산 119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편당 수송가능인원도 울산·대구·부산은 900명대인 반면 광주는 600여명에 그쳐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광주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KTX 이용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10량 규모의 열차를 20량으로 증량하고, 주말 배차 횟수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정부 공약사업인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 제외 등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세대 공급 등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과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원도 거듭 요청했다.

박성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전남연구원 8년 만에 '재분리'

이사회 19명 중 17명 '찬성'

광주전남연구원(이하 광전연)이 8년 만에 재분리에 도장을 찍었다. 27일 광전연 이사회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제출한 광전연 분리의

견서에 재적의원 19명 중 17명이 찬성해 분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광전연 분리는 연구원 역사상 두 번째다.

지난 1991년 단독 출범한 전남발전연구원(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됐고, 2007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돼 운영됐다. 이후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합쳐졌다가 8년 만에 다시 재분리 수순을 밟게 됐다.

통합·분리는 시기는 달라도 이유는 비슷했다. 1995년과 2015년에는 공동 발전

을 명분으로 통합했다가 2007년과 2023년에는 연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리하게 됐다. 광주시는 도시 행정, 전남도는 농어촌 및 지방소멸 등 지역 특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각각의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광전연은 앞으로 분리 절차를 밟는다.

먼저 분리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꾸려지고, 시·도가 각각 근거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7월 광주와 전남의 연구소로 개원할 예정이다.

연구원의 조직과 규모도 관심이다. 연구원은 분리해도 지역대표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확대하고 연구원 출연금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개편을 통해 '상생협력단'을 신설, 시와 도의 협력과제를 연구한다. 최황지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 16일(일) 오전 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